

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

Information about Financial Support for Informationization
and Information Industry

정보산업은 우리나라
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
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
재력을 갖고 있다. 또한
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
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
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
전은 시급한 과제라고
할 수 있다. 특히 국민
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
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
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
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
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.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
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
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
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
한다.

<편집자 註>



우리나라 정보화 수준 및 정보산업 현황

정보산업의 정의 및 분류

- 정의 : 정보의 수집, 가공, 축적, 전송,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- 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기기,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지원등 대분류로 구성됨

정보산업의 중요성

- 인력공급과 생산성면에서 비교우위가 강한

[표 1] 주요산업기술별 경제적 중요도 분석결과

구 분	정보통신	원자력	재료공학	생명공학
● 신상품창출도	9	2	4	4
● 원기질감 기여도	9	1	4	3
● 기업이익의 창출능력	10	2	6	3

※ 자료 : OECD, 1990년 : 최대=10, 최소=1

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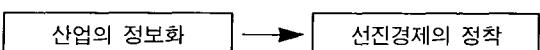
- 에너지절약형, 저공해 산업으로 우리나라에 적합
- 고부가가치, 첨단기술산업으로 향후 국가사회 및 경제성장의 견인차

정보산업의 현황

- 91년 현재 정보산업의 생산액은 341억불(GNP 점유율 13%)이며, 이중 정보처리산업은 3%의 비중으로 기기중심의 불균형 성장임
- 기본통신, 반도체 등의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
-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술인력·자본금규모 등에서 영세하며, S/W전문기업의 비중이 낮음 (선진국에 비해 10~20년 정도 뒤떨어져 있음)
- 무선 및 데이터 통신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 하며, 부가통신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수준임

정부의 정보산업 육성전략

- 2001년까지 전략적 정보산업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
- 산업의 정보화로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 강화
- 사회의 정보화 촉진→국민생활의 질을 향상,



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, 계층간 균형발전

-국민편의 지향의 민본행정 구현

-전국동시정보시대 구현→도농간, 계층간 문화·정보격차 해소

국내 정보통신산업 전망

- 2000년대에는 전체산업의 18%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

[표 2]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전망

(단위: 억불%)

구 분	1991	2001	2011
GNP	2,167	4,184	7,353
정보통신산업생산액	200	739	2,059
GNP대비	9.2	17.7	28.0

※ 자료 : '90. 1 한국정보산업 발전계획 촉진에 관한 연구, 정보산업연합회

※ 2000년 세계시장 규모 : 23,800억\$ 예상

- 정보통신산업은 최대 고용산업 부문으로 대두

※ 미국경우 고용인력의 50% 상당이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종사

정보화 및 정보산업 수준

국가정보화 수준

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0~20%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. 선진국과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부문은 정보설비 부문이며, 격차가 큰 부문은 정보서비스 이용액으로 나타낸 정보이용부문임. 정보처리서비스 매출액은 92년 기준으로 15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임.

정보산업 수준

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정보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

[표 3] 선진국과의 정보화 수준 비교

구 분	KIST	한국전산원(단순평균)	한국전산원(기중치)		
	'90	'90	'92	'90	'92
한 국	100	100	123	100	124
미 국	808	661	856	658	853
일 본	1022	469	657	475	665
독 일	695	423	585	417	584
영 국	541	478	624	468	617
프랑스	579	437	542	435	541

※ 자료 : 정보화 백서, 한국전산원, 1994.

※ 주 1 : 한국 '90년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함.

2 : KIST 연구결과 및 한국전산원(기중치)결과는 각 지표 항목의 성장률을 기중치로 하여 국가정보화 지표를 선출한 것임.

● 정보화 투자예산을 보면, 91~94년의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2001년에 일본의 91년수준, 2006년에 미국의 91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.

[표 5] 각국의 GNP 대비 IT비용의 비교 (1992) (단위 : %)

구분	한국	일본	싱가포르	대만	말레이지아
GNP대비 IT비용	1.23	2.38	2.46	1.00	0.96
	37	70	48	31	39
	IS	63	30	52	61

※ 출처 : GNP대비 IT비용/1993. 11. 29-ASOCIO Countries

격차를 가지고 있고, 경쟁상대인 대만,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정보화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 있음.

소프트웨어 기술수준

-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은 일부 응용 소프트웨어만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일본이나 미국과는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음.
-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분야는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하는 불균형 상태로서 갈수록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짐.

[표 4] 경쟁국의 소프트웨어 수출비중(1992)

국가명	한국	싱가포르	대 만	인 도	호 주
수출비중	3.7%	25%	6%	57%	13%

※ 출처 : 대만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5개년 계획('94. 3)-대만 정보산업책진회

정보화 투자수준

- 우리나라의 정보화 투자수준은 경쟁국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1/2 수준임

[표 6] 정부 정보화 투자 예산 (중앙행정분야)

구분	한국	일본	싱가포르	대만	말레이지아
GNP대비 IT비용	1.23	2.38	2.46	1.00	0.96
	37	70	48	31	39
	IS	63	30	52	61

※ 출처 : 정보뉴딜구성(노무리총합연구소 1993. 7), 국가기간 전 산망 기본계획(전산망 조정위원회 1990, 1992), 국가정보화 백서(한국전산원 1993), 재정금융통계(재무부 1993) ● (#) : 추정치로서 94. 일본의 정보화 정책-JISA뉴스속보 NO223 및 전기통신 9.6, 9.13에 근거(정산연 1993. 12).

금융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향

필요성

- 국제화·개방화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혁기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화 촉진의 필요성
- 정보산업의 높은 성장성 및 고부가가치성
- 정보산업의 과도한 초기투자, 장기간의 투자회 임기간(5년~10년)으로 인한, 자금 지원의 필요성
- 정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기술발전 속도가

매우 빨라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, 시설투자 및 고급인력 충원이 절실하나 현행 금융지원 체계 및 지원시책이 취약한 실정임.

개선방향

- 정보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수립
 -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 산출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수립
 - 사업성 및 신용담보의 자금 지원 방안 제안
-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
 - 표준산업분류체계 조정 :
 - 정보산업 분야는 산업분류체계 및 각종 법령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(DP, DB, S/W 등),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제한됨. 이를 정보산업(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기기,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지원)으로 확대·통합하여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산업 분류체계의 정비 작업이 필요
 - 상업어음 할인, 제조업 지도대출비율 등에 서의 불이익 해소
 - 정보산업체의 제조업 범주 포함 또는 제도의 융통적인 운용 필요
- 국제화·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서의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
 - 국가산업 측면에서 정보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, 미래 국가사회의 기반구조라는 인식아래 시장개방압력 증대 및 산업 육성, 기술개발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보산업과 정보화 투자대상의 신설·확대 필요
- WTO체제에 대비한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

[표 7] 정보산업부문의 NETA결에 따른
국내 금융·조세지원제도 존속여부에 대한 사항

제도구분	허용 o 부분기능△ 금지 x	제도구분	허용 o 부분기능△ 금지 x
1. 수출지원제도			
· 무역금융	△x	· 해외사업 손실준비금	x
· 외화획득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	x	· 해외투자자금 대출제도	o
· 해외시장 개척준비금	x		
2. 중소기업 지원제도			
· 신용보증기금증기지원	o	·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	o
·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	o	· 창업중소기업지원	o
·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	o	· 중소기업의 특별상각	o
·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 세액공제	△x	· 기술개발준비금 설정	o
· 중소기업협동회사입지지원	o	·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 기업 발굴지원	x
·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	o△	·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	o
3. 산업입법 지원제도			
· 공업기반 기술개발산업지원	o	· 외화대출제도	o
· 공업발전기금	o	· 투자기금증 기술개발지원	o
· 기술개발자금(신은)	o	· 기술개발자금(증기은행)	o
· 중기기술자금 (일반은행)	o	· 기술개발자금 손금산업	o
· 신기술기업화시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	o	· 기술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	o
· 기타 기술개발관련 지원	o	· 국산기자재 사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처분	x

※ 자료 : UR 최종 협정 해설·한국무역경제(94)

- UR협상의 타결은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의 창출을 의미하고 있는데 수출 손실준비금,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관련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나, 반면에 연구개발, 특성 지역내의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금융상의 지원은 허용되므로 이를 실효성 있게 확충·강화해 나가야 함.

- 아직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무역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국내산업 보호와 통상마찰의 최소화에 주력하여야 함.

- 정보산업에 대한 인식제고
 - 금융지원제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산업의 적극적인 홍보
 - 제조업 위주의 사고 및 관행 타파

금융지원현황

자금지원 제도현황

정부출연 연구지원사업

-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업
- 특정연구개발사업
-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

특수시책자금

- 정보통신진흥기금
- 과학기술진흥기금
-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
- 중소기업자동화자금
- 공업발전기금
-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
- 특허비용지원
- 해외시장 개척기금

은행의 주요시책자금

-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
- 기술개발자금
- 창업지원자금
- 해외시장개척자금

일반금융자금

- 일반대출자금
- 무역금융
- 개발기관자금
- 기술개발자금
- 생산기술개발자금
- 첨단산업육성자금
- 자동화설비자금
- 정보산업자금
- 해외투자
- 국산기계 수요자에 대한 중장기 원화 대출

제도·관행적 현황

● 정보업체 평가기준

- 현재의 기업체 평가기준은 제조업위주의 유형성 항목이 많아 정보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함.

● 기술담보 융자제도

-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보업체가 기술력을 신용으로 금융 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음.

● 리스제도

-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의 산출물이 리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취급되고 있지 않음.

● 정보업체 어음할인

- 정보산업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나, 중소업체들의 동종거래에서 수반되는 어음은 실질적으로 할인이 어려움.
- 상업어음 할인에 관한 상세내용
- 개요

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(배서양도 및 인수포함)된 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매입함으로써 기업간의 신용을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대출

양식으로 여타 은행대출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업 단기운전자금의 주요 조달원으로 활용.

· 적격업체 선정

- ① 기업체 종합평가표의 종합평점 45점이상
(대기업 : 50점)
- ② 당좌거래가 있는 업체로서 거래실적이 양호할 것(단, 중소기업으로서 수취어음의 할인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좌거래 없이도 적격업체로 선정가능)
- ③ 연체 대출금 또는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정리한 후 2개월 이상 경과 업체
- ④ 적격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일 것
- ⑤ 개신 또는 재심사 판정을 받아야 할 기간을 경과하여 적격업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 후 1년이상 경과한 업체일 것

[표 8] 상업어음 할인조건

이 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할인 적격어음 : 8.5% 기타어음 : 자유화(일반적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우대금리 +2.0% 범위내에서 차등적용)
어음기간	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금융기관의 관행상 단기운전자금대출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최장 1년이내
할인비율	어음 금액의 100%
상환방법	할인금액의 결제대전으로 상환 (할인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할인의뢰인이 상환)

● 창업금융

- 창업투자의 경우 담보, 제조업 지도대출비율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정보산업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으나, 관행

상의 제약이 많으며 창업투자의 전체적인 부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.

● 신용보증 확대

- 업체의 보증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보증기금의 자체한도가 부족하여 보증서 발급을 못하는 상황과, 보증서 발급시에 부동산 소유 유무를 고려하는 관행이 있어 혜택이 제한됨.

[표 9]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상세내용

보증의 종 류	대출보증, 제2금융보증, 지급보증의 보증, 납세보증, 사채보증, 어음보증, 시설대여보증, 이행보증,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
보증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자금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 · 운전자금 : 자기자본의 300% 이내로서 업종별 $\frac{1\text{회전운전자금} \times \text{심사평점}}{70}$ 범위내
동일안보증한도	15억원
간이심사 제 도	1억원이하 운전자금보증, 시설자금보증, 납세보증, 이해보증,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3억 원이내 운전자금보증
한도거래 보 증	일정금액의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한 후 그 범위내에서 조사, 심사, 약정절차를 생략한 후 보증서 발급

● 밴처 캐피탈

- 제도적인 면에서의 차별은 별로 없으나, 실제 운영면에서 응자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지원이 제한적임.
- 담보위주의 자금지원방식으로 인하여, 담보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보산업에 불이익이 있음.

● 정보기술개발금융

- 정보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금융제도 취약

[표 10] 지원대상

보증의 종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신용보증 : 기술대출보증, 기술사채 인수보증 일반신용보증 : 대출보증, 자금보증의 보증, 회사채보증, 비은행대출보증, 납세보증, 어음보증, 시설대여보증, 이행보증
동일인보증한도	15억원
보증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: 연1.0%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: 연1.5%

● 금융기관 규제사항

- 제조업 의무대출비율로 인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의 불이익이 많음.
- 정보산업에서 전산센터는 제조업의 공장과 동일한 개념이나 이를 인정치 않음.

● 기술도입에 관한 금융지원

- 기술도입 용자 대상 규정중 시설재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음.

● 금융지원제도 홍보

- 난립한 제도의 복잡성
- 금융지원제도 홍보 부족

금융지원의 문제점

제조업 위주 금융정책으로 인한 문제

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영세성,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도 인건비, 경비 등에 소요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특성으로 인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, 보증 심사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함. 또한 취급자금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.

●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적 난해성,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취급 기피 경향

● 제조업 의무대출 비율 등 비제조업에 대한 각종 규제

정보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

● 정보관련 기기의 구입시에는 리스, 국산기계 구입자금, 자동화설비 자금 등의 다양한 금융 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나,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금융은 정보산업자금, 정보통신진흥기금,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금액도 충분하지 못함.

● 담보력 취약(소프트웨어는 후취담보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.)

● 소프트웨어가 리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리스업계에서도 인식하고는 있으나, 이동성, 환금성 등 유체 기계 설비와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, 실제 취급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.

금융지원제도 구도 및 홍보상의 문제

● 복잡 다기한 지원제도

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체제 미확립

개선방안

개선방안 요지

제조업 대비 불리한 치우 개선(불이익해소 차원)

● 정보산업체 평가기준 제정

- 기존의 기업체 평가기준 보완, 사업성 강조

● 리스제도 개선

- 특정물건의 범위에 시설, 설비, 기계, 기구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포함

● 정보산업체 어음할인

-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 취급절차 중 재할인 대상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

● 신용보증 확대

- 보증기금 등의 신용한도 상향조정
-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의 성장성 및 신용도에 의거하여 보증하도록 함.

● 밴처 캐피탈 확대

- 투자위주의 자금지원 패턴으로 이행
 - 투자 및 조건부 융자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(현재 90% 정도인 융자 비율 축소)
-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 유도
 - Risk는 높으나 성공시 높은 Capital Gain이 보장되는 산업의 중점지원 유도

●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Guideline 설정 및 행정지도

- 담보위주의 자금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용대출로 이행
- 기업도산시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으로 채권자의 채권만족 기대 어려움.
- 담보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보산업의 경우, 신용대출 필요성 절실

● 금융기관 규제사항

- 제조업 지도대출비율 조정 :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을 대상에 포함. 또한 의무비율 폐지
- 정보산업의 전산센터를 제조업의 공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(여신운용규정 중 토지의 매입 :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 건설용 등 여러부분에서 나타나는 공장에 전산센터 포함)

● 기술도입에 관한 금융지원

- 기술도입 융자 대상 규정 중 시설재 수입

자금 등의 시설재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융자 및 대출근거 마련.

정보산업의 사업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 → 전략적지원 차원

● 담보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보산업체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신용금융제도 정착

● 정보산업 기술평가제 도입

-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보산업체가 기술력을 신용으로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.
- 하드웨어 업체를 제외한 정보산업체 기술 평가 기준 마련
- 평가결과를 신용으로 연결하여 대출 우대 또는 지원 연계
- 업체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함
- 업체평가는 업체의 전반적인 잠재능력을 평가
- 사업평가는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
- 기술평가를 전반적인 기초요소로 활용
- 평가요소, 평가방법, 평가조직, 평가절차를 제시 : 평가요소는 평가대상 항목이며, 평가방법은 가중치 및 배점, 평가조직은 위원회, 전문기관 등의 평가수행 조직, 평가절차는 단계적인 평가자료 수집, 평가위원회 구성, 평가수행, 평가결과 통보 및 사용 등의 평가수행 과제임
-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요소를 선정하고, 선정된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의견으로 사용

● 리스제도 개선(정보산업 전문 리스제 도입)

- 정보산업의 발전단계, 파급효과를 고려하

- 여, 일정기간 집중지원 근거 마련→시설대 여액의 정보산업 의무 지원 비율 신설

● 창업금융 활성화

- 창업투자회사의 업종별 전문화 유도
 - 현재의 백화점식 투자보다는 유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가 바람직함→각 사별 전문화 유도
 - 유사업종 등에 집중 투자하면 사업성 검토 능력 부족으로 인한 투자실패 사례를 줄 수 있어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
-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영역 확충
 - 투자로 국한된 지원방법을 신기술금융회사 수준으로 확대
- 신기술금융회사의 창업자금 적극지원
 - 신기술금융회사도 업력이 오래된 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자금 적극 지원 필요
 - 소프트웨어 산업 등 담보력이 취약한 대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창업자금 중점 지원

● 정보기술개발금융 활성화

- 기술개발자금의 확대
 - 정부의 기금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부문을 확대 강화
 - 개발기관 및 일반금융기관의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비율 확대 및 독립성 확보
- 첨단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
 - 고시한 첨단기술을 개발할 경우 소요금액을 100%까지 지원하며, 실패시 일정비율을 상환 감면하고, 동 금액은 재정에서 충당
- 정보기술개발 관리체계 개선
 - 정보기술의 효율적 개발과 개발관리를 위하여,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과제선정, 관리 등을 관장

금융지원방안 개선효과 요약

정보산업체에 대한 자금의 가용성 확대

- 제조업 지도대출비율 감소, 창업금융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정보산업 가용 자금의 확대
- 특히,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등 비제조업에 속하는 정보산업 부문의 자금 가용성 확충

정보산업에 대한 인식전환

-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인하여 정보산업 자금 취급기피 현상해소
- 사업성 평가 능력의 향상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화
- 기술평가 및 업체 평가기준의 제정으로 금융지원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 및 정보산업체 애로 타개

기술신용 담보제도의 확립

- 신용에 대한 개념의 확대 및 정착으로 지원 제도의 활성화
- 기술 및 사업의 내실화 유도로 정보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.
- Venture Capital 창업투자기관들의 정보산업에 대한 인식제고

국가경쟁력 강화

- 정보산업지원은 전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WTO체제하에서 산업 경쟁력,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룩
- 정보화 확산을 통해 대국민 생활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정보이용 수준 향상 **DPC**